

# 전후 한일관계의 구도와 민주당 정부 하의 한일관계\*

최 희 식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전임강사

냉전 시기 한일관계는 미소냉전이라는 구조 속에 반공전선 국가와 반공기지 국가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미국의 존재가 한일관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 한국과 일본이 연계되어 '유사동맹적 특수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정치체제의 상이로 인해 가치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했으며, 과거사 청산이 도외시되었고 이로 인한 불신으로 인해 한일 안보협력은 불가능했다. 탈냉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기본적인 가치관의 공유 및 힘의 상대적 균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일관계는 대등적 관계로 전환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가치공동체가 형성되어 갔으며, 냉전 시기 터부시되었던 안보교류 및 대화가 진척되었다. 하지만 역사문제의 분출을 억제하는 요소였던 냉전의 붕괴는 역사문제의 정치성을 제고시켰다. 포스트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관계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질서에 개입 하면서, 이를 지탱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견고하게 하려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내에서도 중국의 대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질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2010년 수상담화처럼, 전향적 역사정책이 전개되며 역사문제가 관리되면서 양국 간 관계를 양호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군사 정보 포괄 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같은 구체적 군사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척되어 가고 있으며,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의 형태로 한일 군사협력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주제어: 한일관계, 민주당, 가치공동체, 역사문제, 한일 안보협력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일본학 연구지원 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2011년 1월 27일 일본 동경대 워크숍, 2011년 4월 29일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성과 발표회, 2011년 8월 19일 현대일본학회 하계 학술대회의 발표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당시 좋은 토론을 해 주신 기미야 다다시(木宮正) 등 동경대 교수님들, 남기정 서울대 교수, 박정진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동시에 유익한 코멘트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I. 들어가며

본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을 기본으로 ‘탈 식민지화’된 한일관계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냉전 질서 속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완전한 청산, 즉 역사문제는 뒤로한 채 한일 간의 연계를 요구하는 미국의 냉전전략에 편승하는 형태로 국교를 맺었다. 한국은 대북 봉쇄정책과 경제발전 전략 속에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일본 또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단순한 경제원조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이러한 ‘역사문제 청산 없는 국교정상화’, ‘미완의 국교정상화’는 전후 한일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전후 한일관계는 어찌 보면 이러한 미완의 국교정상화를 완성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미국 동아시아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 한국과 일본이 연계됨으로써 ‘유사동맹(quasi alliance)적 특수관계’를 형성하며 한일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국가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일 국교정상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미완의 국교정상화’였다. 먼저 역사문제 해결을 도외시하여 양국 간의 진정한 화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문제의 미해결로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대일 거부감이 존재했고, 일본 또한 보혁 대립 구도 속에서 군사·정치적 대외 역할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여 한일 안보협력은 터부시되었다. 동시에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수행하기 위해 권위주의 체제를 고수했던 한국, 보혁 대립 구도 속에 ‘냉전의 국내화’ 현상이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일본, 양국은 이른바 ‘체제마찰’을 겪었으며 이는 공통적 가치관의 부재를 의미했다. 1965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가 남겨둔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완의 국교정상화가 전후 한일관계의 흐름을 규정해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일본 민주당 정부 하의 한일관계를 살펴보면서 이

러한 미완의 국교정상화가 남긴 세 가지 측면의 과제에 대해 일본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당 정부 하의 한일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한일 국교정상화에서 나타나는 냉전형 한일관계의 구도를 명확히 하여, 탈냉전 이후 이러한 구도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민주당 정부의 대한(對韓) 정책 혹은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 연구 혹은 현상 분석적 연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 정부 하의 한일관계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후 한일관계의 구도 속에서 민주당 정부 하의 한일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의해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접근방법과 시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 II. 미완의 한일 국교정상화와 냉전형 한일관계 구도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냉전전략은 소련 및 중국 봉쇄정책이라는 글로벌 전략에 입각해, 반공 전선국가와 반공 후방기지국가와의 적극적 연계를 모색하며 반공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남기정, 2001). 반공 전선국가에게는 대립하고 있는 공산권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게 하면서도 이들 사이의 무력충돌이 소련과의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반공 전선국가의 과도한 냉전 논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즉 ‘분쟁의 국지화’를 모색했던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반공 후방기지국가를 육성하여 그 연계를 통해 반공 전선국가의 억지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냉전전략은 일본을 반공 후방기지국가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같은 반공 전선국가와의 군사적 및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여 자유 아시아의 연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중재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최희식, 2009b: 123-129).

박정희 정권은 반공정책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고, 이승만 정권 시기 보였던 ‘반공’과 ‘반일’이라는 모순된 국가전략에서

탈피하며 반공을 전면화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국가이념으로 반공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북 봉쇄망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위해 발전국가 노선을 탐색하며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 했던 박정희 정권의 외교전략에 기인한 것이었다.

1960년대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 또한 한국과 대만 및 남베트남 등 자유아시아에 대한 경제원조의 증대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아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태평양 전쟁으로 단절된 아시아와의 관계를 수복하려는 ‘전후처리’ 외교 관점에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는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였다.

결국 한일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전략이 일치되는 부분이자, 냉전 구조 속에서 미국의 아시아 냉전전략과 호응하는 것으로써 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일관계는 명백히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연계될 수밖에 없었다. 한일관계가 특수한 양자 간 관계로 인식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친밀도 때문만이 아니라 한일관계가 미국을 점점으로 연결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전 시기 한일관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먼저 과거 청산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국교정상화가 되어 과거사 청산에 바탕을 둔 탈식민화된 한일관계의 구축 과제가 다음 세대에 미루어졌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의 연계성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국가전략에 불협화음이 존재하여 ‘가치공동체’를 창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지배의 유산과 일본의 보혁 대립으로 인해 한일 안보협력은 불가능했고, 이를 대체하여 경제협력이 양국을 연결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오코노기 마사오, 2008: 12-13).

## 1. 역사문제의 미해결과 상호불신

‘탈식민화된 한일관계’는 과거사 청산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 때

한일 역사문제의 해결이란 일본정부가 제국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강제징용 등에 대한 개인 보상과 배상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즉, 역사문제 해결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한일 기본조약 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애매 모호한 규정을 삽입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이 조약문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하면서, 불행한 과거의 완전한 청산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가 당시 상황에서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인식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등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치환되었으며, 이것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역사문제는 미해결의 상태로 방치된 채 양국 간의 진실한 화해는 다음 세대의 과제로 남겨졌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문제의 미해결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상황 그리고 한일 과거사 청산의 상위법 역할을 하였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배상권 규정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친일파 제거에 실패하고, 반공논리를 독재논리로 치환한 한국 정부에게 있어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힘들었다. 동시에 과거청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일본 혁신세력은 오히려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한일회담 반대논리에 치우쳐 과거청산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단순한 경제원조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무엇보다 냉전의 구조적 산물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과거청산을 강제할 규정을 공백으로 남겨둠으로써 한일회담에서의 과거청산 기회를 낮추었다. 애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한국 독립승인 규정이 채용됨에 따라 병합조약의 합법성이 간접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병합조약의 무효에 입각한 교섭을 할 수도 없었다(장박진, 2009: 236-239).

만약 한일회담이 과거청산을 위한 회답이었다면, 기본관계조약은 기타 조약의 근본을 이루는 조약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성격규정

에 입각해 여타 교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관계조약은 청구권 교섭에 밀려 주변화되었고, 국교 정상화 교섭 끝자락에 가서야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른 조약의 ‘헌법’ 역할을 해야 할 기본관계조약에서 과거청산 규정이 소멸됨에 따라, 청구권 관련 조약, 문화재 조약, 재일한 국인 법적지위 조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기초한 과거청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여” 등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일회담에서 과거청산은 ‘소멸’되었다(장박진, 2009: 520-525).

물론 그렇다고 한국 국민들의 과거청산 열망마저 소멸시키지는 못했다. 한국 국민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 침묵을 강요당했을 뿐, 과거사 청산에 침묵하는 한일 양국 정부에 비판적이었다. 한국 국민 누구도 1965년 국교정상화가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믿지 않았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탈식민지화된 한일관계 구축으로 양국 간의 진실한 화해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사죄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결국 역사문제의 미해결로 양국 사이의 역사적 앙금은 해소되지 못했고, 이러한 불신은 후술하는 한일 안보협력 등 다차원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2. 가치공동체의 부재

국내 보혁 대립 구도 속에서,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며, 이를 통해 재무장의 정도를 완화하여 남은 여력을 경제성장에 몰입시키려는 외교정책, 이른바 ‘요시다 노선’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냉전전략은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공산권과도 경제 및 문화교류를 추진하려는 모티브를 내재한 것이었다. 이는 경제입국을 표방하는 외교전략의 구체적 발현이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서 공산권과의 우호관계 구축을 주장하는 혁신

세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대응이기도 하였다. 즉 ‘냉전의 국내화’를 차단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었다. 결국 일본의 냉전전략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 ‘자유 아시아’와의 연계 강화, 경제입국 전략과 국내 보혁 대립 완화라는 측면에서 ‘공산 아시아’와의 정경분리에 입각한 우호관계 구축이 핵심적 외교과제가 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냉전전략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미일 동맹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공산권과의 우호관계를 모색했던 일본의 냉전전략은 이른바 ‘평화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五十嵐武士, 1999: 156-180; 최희식, 2009b: 129-137).

이러한 냉전전략은 한반도 정책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친중파이며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자민당 우츠노미야 토쿠마(宇都宮徳馬, 1965: 71) 중의원은 한일국교정상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본정부는 한일국교 성립 후, 바로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북한과 남한의 교류를 자연스레 촉진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일본이 노력하는 것이 장래 한민족과 영구적 친선관계를 구축하는 데 좋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냉전논리를 초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신한국조항’ 논리와 유사했다.

이렇듯 북한과의 관계를 시야에 넣고,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측의 일원’을 표방하는 일본 외교에 있어 주류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는 일화평화조약과 같이 한국의 관할권을 한국에 한정함으로써 북한과의 비정치적 관계, 특히 재일조선인 귀국사업에 여지를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 따라서 사토 에사쿠(佐藤栄作) 수상은 1965년 10월의 중의원 한일특별위원회에서 한일국교정상화와 관계없이 북한과의 관계는 사실적 문제로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해 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sup>1</sup> 위와 같은 일본의 태도는 평화외교의

1. <중의원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1965년 10월 29일). 일본국회의사록 검색시스템 <http://kokkai.ndl.go.jp/>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 및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과는 달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 대북 접근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불신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다. 동시에 우츠노미야 토쿠마 및 구노 츠지(久野忠治) 등 정치인들이 북한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1970년대 북일 접근의 중요한 자산이었다(최희식, 2008: 155-156).

이러한 평화외교적 측면이 내재해 있던 일본의 냉전전략에는 국내 보혁 대립으로 인해 중립주의적 성향이 상존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반발을 초래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또한 철저한 반공논리에 기반하여 공산권 강경정책을 취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재일 조선인 귀국사업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이러한 국가전략의 차이로 인한 한일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반면 한국은 냉전 시기 철저하게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전면화하며, 이를 위해 국내체제를 권위주의체제로 유지하였다. 반공과 권위주의 체제가 양면 일체가 되어 한국의 국가전략을 규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과도한 냉전전략과 권위주의 체제는 일본 내 혁신세력과 자민당 내 친중파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가령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미국의 냉전전략에 편승한 공산권 봉쇄정책으로 비추어져, 혁신세력의 반발을 불러와 정치문제화 되기 일쑤였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호응하는 형태로 대공산권 억지력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유사동맹적 특수관계’를 구축하였으나, 양국이 처해 있는 구조적 환경의 차이로 인한 국가전략 및 정치체제의 차이가 존재하여 양국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국교정상화 이후, 1970년대 일본의 북한 접근을 둘러싼 한일 갈등, 김대중 사건과 문세광 사건을 둘러싼 한일 갈등, 김대중 사형문제를 둘러싼 한일 마찰 등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양국 사이에 ‘체제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오코노기 마사오, 2008: 12-13).



### 3. 안보협력의 부재와 대체물로서 경제협력

일본 외교는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운영되어, 한일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던 미국 동아시아전략과의 연관성 속에서 한국에 대한 관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인접국 한국과는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고, 한국의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일본에 있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이 1961년 6월에 개최된 케네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천년 이상 전부터도 일본에 있어 조선은 일본 자신과 같은 것이었으며, 만약 조선이 공산화되는 경우 일본에 있어 치명적이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金斗昇, 2001: 191; 최희식, 2008: 155).

그렇다면 냉전시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역할은 어떠했을까? 여기에는 군사적 역할과 경제적 역할 양자가 존재한다. 먼저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실마리는 1969년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한국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한국조항은 한반도의 유사사태를 상정하여,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논리 하에, 주일 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사전협의제도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는 것에 의해 오키나와가 수행해왔던 한국 안보에의 역할을 일본이 수용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전시’시, 한국을 포함한 극동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규정한 것이었다(倉田秀也, 2001). 물론 위와 같은 주일 미군의 자유로운 한반도 전개는 이미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밀약되었던 내용이였다(소토카 히데토시, 2006: 495-506).<sup>2</sup> 그렇다면 1969년의 한국조항은 1960년의 ‘밀약’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명확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오키나와에 배치된 핵문제였다. 오키나와의 핵은 일본 방위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의 방위를 목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미국은

2. 일본 정부 또한 2010년 3월 외교문서 조사팀의 조사 결과 이러한 밀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読売新聞(2010년 3월 9일).

오키나와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데 동의하는 대신, 오키나와에 핵을 ‘유사시’ 재반입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냈다(소토카 히데토시, 2006: 243-250).<sup>3</sup> 하지만 이러한 핵 재반입에 대한 약속은 기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일 안보조약 개정 시의 또 다른 밀약, 즉 ‘핵탐재 함선 등의 기항과 통과’를 사전협약에서 제외하는 밀약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소토카 히데토시, 2006: 495-506). 그렇다면 1969년의 오키나와 핵 재반입 약속은 1960년 밀약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한국 및 대만 등에 대한 오키나와의 핵우산 역할을 ‘유사시에 한해’ 실질적으로 일본이 수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동맹(regional alliance)으로써의 미일동맹은 국지동맹(local alliance)으로 기능했던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1969년 확정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자유로운 한반도 전개 및 핵반입 허용 등 매우 소극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 안보에 대한 적극적 역할은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보혁 대립이라는 특수한 국내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 불가피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 방위청은 한국유사를 상정하여 한반도 정세와 일본의 안전보장과의 관계, 미일 양국의 공동대처방안에 대해 ‘미츠야 연구’로 불리우는 연구를 실시하여, 한일국교정상화에 수반되는 한미일 방위체제를 모색하려 했다. 그러나 1965년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의 오키다 하루오(岡田春夫) 의원에 의해 정치 문제화된 이후, 주변 유사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해졌다(高崎宗司, 2004: 86-87). 1978년 황가이드 라인 책정 시에 한반도 사태를 포함한 주변 사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차후 연구과제로 미루어진 것 또한 이러한 보혁 대립 구도 때문이었다.

한국 또한 한일 국교정상화가 과거사 청산을 도모시 한 결과, 식민지 지배의 어두운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해 극히

3. 실제, 2010년 3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당시 미일 양국은 유사시 오키나와에 핵 반입을 인정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위 약속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에 반드시 밀약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読売新聞(2010년 3월 9일).

부정적이었다. 물론 빅터 차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한일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버려짐(abandonment)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을 때 안보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미 언급한 한국과 일본의 사정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빅터·D·차, 2003).

이처럼 보혁 대립의 국내정치와 헌법상의 제약을 감안하면, 군사 면에서의 지원과 관여는 불가능해서 경제협력 이외의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협력이 정치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제원조는 ‘자주국방과 고도경제성장의 병행’이라는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 협조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군수산업의 개발과 고도경제성장의 병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이 자주국방과 고도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의 정책을 이해하고, 한층 적극적인 경제원조를 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한국은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논리를 연장하여 한국이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한국의 대북 억지력 제고라는 측면을 고려한 일본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요구하였다. 이른바 ‘정치적 경제원조’ 혹은 ‘전략적 원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미국이 측면 지원하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며 정치성 짙은 경제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원조를 주창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한국의 반공정부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치적 함의가 짙은 경제협력이었다. 이는 한국 반공정부의 안정화 및 정통성 확보에 일본이 적극 관여하는 것을 의미했다(최희식, 2011: 304-306).

이러한 전략적 경제원조는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 시기에 핵심 문제로 재등장하게 되었다(小此木政夫, 2001). 한국은 ‘방파제’론을 다시금 강조하며, 당시 2차 석유위기로 위기에 처해있던 한국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요구하였고 미국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일본을 압박하여 대규모 원조를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냉전 시기 한일관계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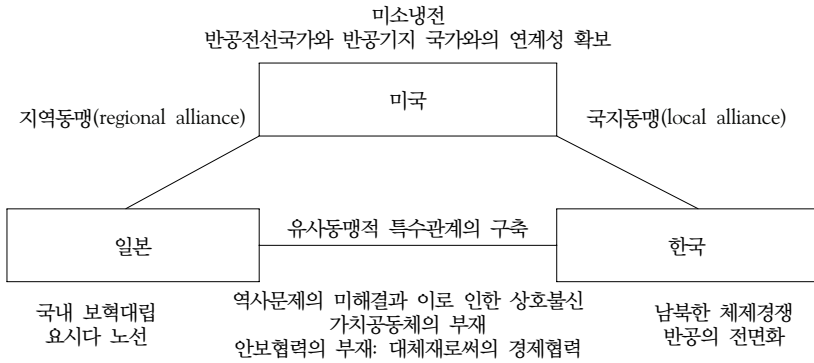


그림 1. 냉전형 한일관계의 구조

### III. 탈냉전형 한일관계의 모색

이러한 냉전형 한일관계는 1989년 냉전의 붕괴와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1987년 6·29 선언과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한일 간 정치경제체제의 접근과 기본적인 가치관의 공유” 및 “힘의 상대적 균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일관계는 대등적 관계로 전환되어 갔기 때문이다(기미야 타다시, 2006: 385-392).

특히, 냉전의 붕괴는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파일(Kenneth B. Pyle)은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질서는 “소련의 힘과 영향력이 사라졌지만 미래의 지역체제구조는 아직 형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좌표도 질서체계도 없는” 휴지 기간이었으며, 이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목적이 불확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파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파일, 2008: 469-470).

미국은 아직도 냉전 전략을 고수하려고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적절한 변경 없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당분간 질서를 유지하는 임시대역인 휴지기간의 ‘섭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미국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순수한 양자 관계의 역학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한일관계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이 작용하게 되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공동체’를 형성해 가게 되면서 한일관계에 긍정적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일본의 대한(對韓) 인식을 전환시켰고, 이로써 한일관계는 원조국가와 피원조국가라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대칭적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시 가이후 토시키(海部俊樹) 수상은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협력관계의 차원을 높여, 세계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라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內閣總理大臣官房監修, 1992: 326-328). 1991년 1월 발표된 <한일 우호협력 3원칙>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과 상호이해의 증진,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화해 그리고 번영과 개발을 위한 공헌의 강화, 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관여” 등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한일관계의 다차원적 발전을 구가했다.<sup>4</sup>

이러한 한일관계의 발전은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더욱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이 선언은 일본의 과거역사에 대한 사죄, 한국의 전후 일본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해서,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협력을 구가하였다. 이 선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일관계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과 세계적 문제에서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는 점이다.<sup>5</sup> 1991년 발표된 한일 우호협력 3원칙 또한 그러했듯이, 한일 파트너십 선언도 양자 간 관계를 넘어선 지역문제 및 세계 문제에서의 상호협력을 선언하여 한일관계가 다차원적으로 발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이 선언에서는 안전보장에 관한 한일협력이 구가되면서 한일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1990년대 이후 냉전의

4. 동아일보(1991년 1월 10일).

5. 일본외무성 『外交青書』(42호, 1999), 311-315.

붕괴와 이로 인한 미국의 존재감 하락으로 한일 사이에서 본격적인 안보교류가 시작되었다. 물론 공동 군사훈련 등 군사협력까지는 진척되지 못하였지만, 냉전기에 비교하면 비약적 발전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이러한 탈냉전 이후 불안정한 아시아 정세를 바탕으로 한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1998년 12월 한국 해군에 의한 북한 잠수정 격침사건 이후,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 및 군부 당국자 간의 핫라인이 설치되었다. 동시에 1999년 8월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함정이 동중국해에서 공동 해난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서동만, 2006: 149; 서승원, 2011: 28-29).

이러한 한일 안보교류의 증대는 1998년 新가이드라인이 책정되면서 주일 미군의 극동지역 전개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을 가능케 했던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주일 미군의 후방지원까지 확대되면서 이를 보완할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북한 핵문제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맞춰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양국 정부의 문제의식도 크게 작용하였다(서승원, 2011: 29).

이러한 가치공동체의 발전은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성장이라는 내재적 변화와 더불어 일본 국내정치적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90년대 이후 일본은 냉전의 붕괴와 더불어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전환을 시도하며, 보통국가로의 발전을 꾀하였다. 이는 냉전의 국내적 양상이었던 보혁 대립의 붕괴라는 국내 정치 구조의 변화와도 연동되었다.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던 요시다 노선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협조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는 혁신세력의 대한(對韓) 인식을 개선시켜,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국내적 분열을 야기하는 구도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아시아 내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상당한 국력을 소유한 국가는 한국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던 일본에게 있어 한일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는 국교정상화 이후 소멸되었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잠재화된 불만’을 현실화시키면서 한일관계를 긴장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역사문제의 분출을 억제하던 요소였던 냉전의 붕괴는 이러한 역사문제의 정치성을 제고시켰다.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정치인의 망언 등이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가치공동체의 강화는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유도한 게 사실이다. 1995년 8월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제국 시기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전후 처음으로 표명하였으며, 1993년 8월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부 모집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간여한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죄가 표명되었다.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는 외교문서 상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기록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일합방 조약의 무효 및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 보상 및 배상 문제 또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국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일본 내 이러한 전향적 역사인식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보수 세력의 반발은 한국 국민의 감정을 격화시켜 한일관계의 발전을 억제해 왔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교정상화의 부정적 유산이 1990년대 이후 한일관계에 상속되면서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역사문제를 거론하는 한국,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경제협력을 통한 식민지 유산의 완전한 청산을 전제로 역사문제에 대응하는 일본, 이 양자의 갈등을 불러온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국 국민 누구도 국교정상화가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믿지 않았다. 이러한 근본적 불신은 한국의 ‘과잉대응(이원덕, 2006: 425-429)’을 유발하여 한일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반면, 일본은 국교정상화와 이에 근거한 경제협력으로 청구권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다.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 위에 한일관계를 구축하려는 흔적은 없었다. 냉전 시기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수용하며 과거사에 반성을 표명하지만, 대내적



으로는 전쟁책임이나 아시아에 대한 가해책임을 불문시하거나,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이중기준(더블스탠다드)’ 입장을 취한 것은 이런 이유에 서였다(요시다 유타카, 2004). 민주화 이후 역사문제의 청산을 요구하는 한국의 요구에 ‘무신경의 구조(이원덕, 2006: 423-425)’를 보인 것은 이러한 ‘이중기준’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가치공동체의 강화라는 긍정적 힘과 역사문제라는 부정적 힘이 상호 교차하며 탈냉전 이후 한일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장달중, 2008: 31-37).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은 정권 초기 한일 가치공동체의 가능성을 인식하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구가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 치지만, 정권 말기에는 역사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탈냉전형 한일관계는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비 정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일관계는 아시아 국제질서의 ‘휴지기’ 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대두와 북한 문제로 인한 아시아 질서의 불안정성, 하지만 적극적인 관여를 회피하는 미국, 이로 인해 아시아 질서는 불투명한 상태로 머물고 있어 한일 양국 또한 어떠한 전략적 목표 하에 양국 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지 명확한 상이 없었던 것이다.

#### IV.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한일관계: 일본 민주당 정부 하 의 한일관계

##### 1. 일본 민주당 정부의 국제인식과 한국: 가치공동체의 발전과 한 일 안보협력

21세기 아시아의 세력균형은 크게 변화하였다. 21세기 중국은 경제력 및 군사력을 급격히 증대시켜 그 존재감이 제고되고 있다. 이른바 아시아 지역 에 있어 미중 양강체제인 ‘G2 시대’의 도래를 알린 것이다. 물론 중국의 대 두는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질서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2002년 국

제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게 제고되면서 ‘G2 시대’ 개념이 대두되었다.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통해 그 존재감이 쇠퇴하고 있다. 중국의 대두와 일본의 쇠퇴로 인한 아시아 세력균형의 변화로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한국, 일본, 미국 포스트 탈냉전 시대를 전제로 국가전략을 재편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일본 외교에 거대한 도전이 되었다. 특히 2009년 역사적 정권교체로 수립된 민주당 정부는 과거 자민당과는 다른 국가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민주당 정부의 출현은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과 중첩되었으며, 이러한 외교 전략의 재편은 이하에 설명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자민당의 외교전략을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따라서 자민당이 미일 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 외교에 함몰되었다며 비판을 가하던 민주당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 조정은 그 존재근거이기도 하였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의 ‘우애 외교’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하토야마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전략과 더불어 중국의 무책임한 대국화, 이 양자를 거부하며 일본의 생존전략을 찾고자 하였다. “계속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분투하는 미국과 패권국가가 되고자 기도하는 중국의 틈에서 일본은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하토야마의 근본적 문제제기였던 것이다(鳩山由紀夫, 2009). 물론 이 전략은 미일관계뿐만 아니라 중일관계마저 상대화시키는 전략이었으나 정책적으로는 미일관계의 재조정에 머물렀다. 실제 하토야마 정부의 대중 정책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에 “대등한 미일관계”를 외치며, 미일 행정협정의 개정, 후텐마 기지 이전, 배려예산의 조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으며, 이러한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박영준, 2009; 김성철, 2009).

이러한 전략 속에 하토야마는 미중 양강체제에 직면한 다른 아시아 중소 규모 국가들을 언급하며,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鳩山由紀夫, 2009).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소 규모 국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방종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싶다. 또한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감소시키면서 그 거대화 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제국가들의 거의 본능적인 요청일 것이다. 그것은 지역적 통합(동아시아공동체 - 필자 삽입)을 가속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하토야마 수상의 중요한 정책이었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에 있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아시아 중소규모 국가를 주요한 추진체로 인식하였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미중 양강체제에 직면한 아시아 중소규모 국가와 일본의 문제의식을 일체화시키고, 이들 간의 협력으로 양 대국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는 외교전략은 기실 한국과의 협력 강화 노선으로 발전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중소규모 국가 중 상당한 국력을 소유하면서 일본과 가치공동체를 구축해 오고 있었던 국가는 한국이었기 때문이다. 후술하듯, 기존의 아시아 중시 외교에 있어서는 대중 외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에 비해, 여기에서는 한국이 일본 외교전략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본과 아시아 중소 규모 국가의 협력에 의해 ‘책임 있는 대국’으로 연착륙해야 하는 전략목표의 ‘대상’이며, 한국은 이러한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외교에 있어 한국에 더 높은 ‘전략적 가치’<sup>6</sup>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하토야마 수상의 첫 해외 방문지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09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북한 문제, 기후변화 문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의 협력을 합의하였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하토야마 수상은

---

6. 여기에서 전략적 가치라는 개념은 외교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협력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대중 관계는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외교이다. 하지만 외교목표에 따라 중국은 견제의 대상이거나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외교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협력대상이거나 외교파트너로 선정되는 경우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한 양국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인접국이며, 아시아 외교의 핵심이 되고 있다. 더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sup>7</sup> 이는 한일 가치공동체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며, 한일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이숙중·이원덕, 2009).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있어 정치 리더십 부재로 인해 막을 고하게 된다. 동시에 아시아 국제정세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0년은 중국이 일본을 누르고 GDP에서 세계 제2위로 부상함으로써 국제 질서에 있어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해였다. 특히 2010년의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중일 센카쿠 열도 분쟁은 아시아 질서에서 중국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무엇보다 2010년의 제 사건은 일본과 한국의 대중인식을 전환시켜 ‘현실주의적 중국관’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낭만주의적 중국관’이 일정 정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유교·한자 등 문명의 근원에 대한 동경에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2010년의 제 사건은 자국 안보 혹은 외교에 있어 중국의 존재를 현실주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위 사건은 미국의 대중 인식을 전환시켜 적극적인 아시아 개입정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먼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있어 중국의 태도는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진정성 있게 북한을 설득하고 압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미국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결국 한미 양국은 공동 군사훈련이라는 강도 높은 행동으로 대응했으며, 중국은 서해에서의 공동 훈련에 강력 반발하며 미중관계가 긴장되었다.

특히, 중일 센카쿠 열도 분쟁은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했다. 이 분쟁의 특징은 갈등 해결 수단이 극단화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WTO 규정에 위반하는 희귀 지하자원의 대일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일본에 압박을 시도했으며,

7. 일본외무성 HP <http://www.kantei.go.jp/jp/hatoyama/statement/200910/09kyoudou.html>(2011년 1월 20일 검색).

일본의 대중 수출에 대한 통관 절차의 엄격화 등을 이용해 일본 기업의 대중 수출에 차질을 불러왔다. 동시에 군사시설 촬영을 이유로 일본인 4명을 구속함으로써 일본의 중국인 선원 구속과 동일한 대항수단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과잉대응’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지역 해상활동과 연계되며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켰으며, 미국의 적극적인 아시아 개입을 불러왔다. 미국은 영토분쟁에 대한 기존의 중립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센카쿠 열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에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 수립된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의 외교전략은 ‘대등한 미일관계’ 정책에서 이탈하여 미일동맹을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미일동맹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협력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실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은 한국 매일경제신문과의 2011년 1월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과 중국·인도 등 신흥국가의 급부상으로 새해 국제정세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일 양국 간의 안보 분야 제휴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마에하라 외상은 “새해 일본 외교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인접국과 굳건한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sup>8</sup> 이는 2010년 12월 17일, 각의 결정된 〈2011년도 이후에 관련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해서〉<sup>9</sup>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며, 일본과 기본적 가치 및 안전보장 상의 많은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호주와 양자 간 혹은 미국을 포함한 다자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하며 미일동맹 강화 노선을 취할 지라도 그 속에서 한일관계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미중 양강체제 시대, 일본의 선택은 요시다 노선에 대한 반성 위에 미일 동맹을 상대화하며 미중 경쟁 속에 존재감을 상실해가고 있는 일본이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그 존재감을 제고하는 방향.

8. 매일경제신문(2011년 1월 2일).

9.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0/1217boueitaikou.pdf>(2011년 1월 20일 검색).

이질 국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전제로 동질 국가 미국, 한국, 호주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향, 두 가지의 정책지향성(‘두 개의 일본’)으로 표출되었다.<sup>10</sup>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의 일본’은 기존 연구에서 탈냉전 이후 일본 외교의 두 가지 갈래를 설명한 ‘아시아 주의’와 ‘미일동맹 우선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진창수, 2008; 渡邊昭夫, 1992).<sup>11</sup> 조양현(2009)은 현재 일본의 두 가지 국가전략을 미일동맹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유엔 중심의 집단안보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보통국가론’,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보통국가론’으로 칭하고 있는데, 자유주의적 보통국가론의 정책적 내용으로 전향적 역사인식 등 적극적 아시아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아시아 주의’와 ‘미일동맹 우선주의’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 정부 이후 나타난 ‘두 개의 일본’에는 기존의 아시아 주의, 미일동맹 우선주의와는 다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주의’는 미일동맹을 상대화하여 전향적 역사인식 등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전략 속에서 대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기실 아시아 주의를 적극적인 대중 정책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미중 양강체제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의 새로운 외교전략은 미중 양 대국 사이에서 일본의 자립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및 아세안 등 아시아 중급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미일동맹 우선주의’는 고이즈미 정권 시기에서 잘 드러나듯, 미일동맹을 우선한 결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어 종종 마찰을 일으키곤 했다. 하지만 미중 양강체제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 외교에서는 미일동맹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한일관계에 높은 전략적 가치

10. 본 논문은 미일동맹과 아시아 외교를 둘러싼 인식 차이를 바탕으로 ‘두 개의 일본’으로 칭하고자 한다.

11. 최희식(2009a)은 일본의 국가 아이덴티티가 아시아의 일원 의식을 강조하며 아시아 내부에 존재하려는 의식과 아시아를 상대화하며 아시아의 밖에 존재하려는 의식 사이에서 분열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대두로 인해, 아시아 내부의 동질국가인 한국 및 호주와의 협력이 미일동맹만큼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두 개의 일본’ 어느 경우든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또한 ‘두 개의 한국’이 갈등 현상을 보이던 이전과는 달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통해 대중인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 외교에 있어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대 전략 속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진보세력, 북한과 이를 지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거부감에 바탕을 두고 종래의 한미일 삼각관계를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자 하는 보수세력 간의 갈등이 존재해 왔다. ‘두 개의 일본’ 속에서는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어 그 편차가 크지 않음에 비해, ‘두 개의 한국’의 국제인식에 있어 한일관계가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의 전략 속에서 한일관계는 그 전략적 가치가 높지 않지만, 후자의 전략 속에서는 한일관계가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가령 진보세력의 외교전략 속에서는 북한과의 평화공존이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고, 그 속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이며 중국을 자극할 여지가 많은 한일 혹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소극적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통해 한국 안보에 있어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한일관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어 가고 있다. 즉, ‘두 개의 한국’ 노선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한일관계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편차가 상황적 변수에 의해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사이에는 이전까지 티부시 되어 왔던 군사협력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2011년 1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군사 정보의



상호 제공 및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한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두 협정은 실질적으로 양국의 첫 군사협정이라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sup>12</sup> 전자의 협정은 대북 정보의 상호 공유를 염두에 둔 협정으로 한반도에 대한 한일 안보협력의 성격이 크며, 후자의 협정은 해외 군사전개에 있어 상호협력의 성격이 강하다. 앞에서 설명한 미일동맹 재정의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주일 미군의 후방지원이 가능해져서 한반도를 둘러싼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지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은 지역동맹으로 격상되어 주한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개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대한 한국군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지역에서의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양 협정은 미일동맹 재정의와 한미동맹 재정의에 따른 한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일 군사협력이 한미일 삼자의 군사훈련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2010년 10월에 한국에서 실시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상봉쇄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였다. 이에 앞서 동년 7월 실시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4명이 미군 함정을 타고 훈련 상황을 참관한 적이 있다. 2010년 12월 2일에는 2011년 개최될 예정인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참여한다고 보도되었다.<sup>13</sup> 동년 10월에는 한미일 장군급으로 구성된 막료회의가 운영되고 있으며, 29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육군 막료회의가 개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sup>14</sup>

하지만 이러한 한일관계의 발전양상은 안정적일 수만은 없다. 역사문제의 대두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두 개의 한국’ 양자의 국제인식 속에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데, 역사문제의 분출은 이러한 편차를 현재화시키고 더욱 확대시켜 한국의 대일정

12. 연합뉴스(2011년 1월 10일).

13. 毎日新聞(2010년 12월 2일).

14. 産経新聞(2010년 11월 7일).

책을 강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일관계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는 그룹에서조차도 역사문제가 발생하면 대일 강경정책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5</sup> 이런 점에서 현 민주당 정부 하의 역사문제가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 2. ‘역사문제 관리’의 제도화 흐름과 그 한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중 양강체제에 직면한 일본의 외교전략은 현재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부의 역사문제에 대한 정책은 매우 전향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하토야마 총리가 부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지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무엇보다 2010년 8월 10일 발표된 간 나오토 수상 담화는 진일보한 역사인식을 보여주었다. 이 성명은 “한국인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일합병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동시에 “조선 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한국에 돌려주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공약이 제시되었다. 물론 한국 내에서는 성명 발표 날짜가 합병조약을 체결한 22일이나 병합을 선언한 29일이 아니었다는 점, 한일합병의 불법성을 얘기하지 않은 점, 문화재의 반환 대신 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박정진, 2010). 하지만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전향적 역사정책이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진창수, 2010).

동시에 과거청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후보상 문제에 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

15. 물론 이들 그룹은 한일관계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역사문제에 대해 최대한 자제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문제가 이들 그룹의 대일 정책을 제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제 2010년 7월 센코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한일 기본조약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반문하며 개인 청구권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표명했다.<sup>16</sup> 물론 이것들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았지만 과거 자민당 정권과는 다른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는 면에서, 역사문제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민주당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것이었다(이원덕, 2009).

물론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 삽입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 한일관계를 긴장시켰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채택했다.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문구를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을 배려한 것이다.<sup>17</sup> 당시 한국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보도가 많았지만, 한일관계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애정과 배려를 평가하는 듯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민주당 정부 하의 역사문제에 대한 정책은 기존 역사마찰의 ‘학습효과’에 의해 역사문제가 정치쟁점화 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기본적인 틀을 정착시켜 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즉, 각료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무라야마 담화 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며, 독도 등에 있어 세심한 발언을 통해 한국 국민감정을 배려한다는 점이 조금씩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민주당 정부 하에서 각료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의 ‘망언’에 의한 정치문제화 현상은 없었다. 동시에 민주당 정부의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여 한일 및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적도 없었다. 또한 독도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한국 국민감정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발언을 피하고,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2010년 4월 하토야마 수상 발언)”, “독도문제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010년 2월 오카다 카츠야

16. 毎日新聞(2010년 7월 7일).

17. 동아일보(2009년 12월 25일).

(岡田克也) 외상 발언)”<sup>18</sup> 등 우회적이며 세심한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야당의 보수위원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마에하라 외상은 ‘불법점거’라는 단어를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 전임자인 오카다 외상 또한 야당 보수위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점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sup>19</sup> 이는 독도 문제가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민주당 정부의 독도정책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역사문제의 관리’ 정책이 나름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까지 그 협력 관계를 심화시켰다. 물론 민주당의 역사문제에 대한 정책은 한국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처럼 민주당 정부의 역사문제 관련 정책이 ‘해결정책’이 아닌 ‘관리정책’에 머물고 있지만, 상당한 성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사문제를 관리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1년 3월 31일 일본 교과서 검증결과 발표는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일본 문부성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린 교과서를 검증통과시킴으로써 한일관계를 악화되었다.

일본 보수 및 우익세력은 ‘자학적 역사관’의 수정을 통해 국가의식과 영토의식을 확고히 하여 일본 민족의식의 재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보수세력은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의 ‘자유주의 사관’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1996년 11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결성한 이래 남경대학살, 종군위안부 등을 부정하는 듯한 새로운 교과서 편찬에 몰두하고

18. 문화일보(2010년 2월 12일).

19. 毎日新聞(2011년 3월 5일).

있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그룹은 이른바 ‘문부족’으로 불리는 교육 정책에 특화된 전문가 국회의원 그룹이다. 또한 이들 그룹은 2006년 교육기본법에 기반하여 교육체계를 재구축하려는 문부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른바 우익 교과서를 위한 政·官·學 삼자 보수연합관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고한 보수체제를 타파하고 교과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1년 3월의 교과서 검증 발표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되었다. 물론 대지진 복구 및 방사능 관리에 여념이 없다는 핑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복구를 위해 주변국의 도움이 절실한 이때, 무엇보다 한국의 일본 돕기 운동으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던 때, 검증결과 발표를 연기하거나 내용의 수정을 통해 한국을 배려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 앞에서 언급한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사례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설서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문구를 삭제하는데 성공하여 한일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것과는 대조되는 사항이었다.

물론 교과서 검증 발표 하나만을 강조하며, 민주당 정부가 역사문제 관리 정책으로부터 이탈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관리정책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존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교과서 검증발표 문제가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역사문제의 분출은 ‘두 개의 한국’에 내재해 있던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편차를 더욱 확대시켜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일본 내 한일관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탈냉전 이후의 특징인 가치공동체에 바탕을 둔 다차원적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새롭게 실질적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문제의 대두는 이러한 한일관계의 성과를 일순간 붕괴시킬지 모른다. 따라서 역사문제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느냐 여부에 따라 한일관계의 역동성은 크게 변할 것이다. 일본의 외교전략 속에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사문제를 관리하려는 정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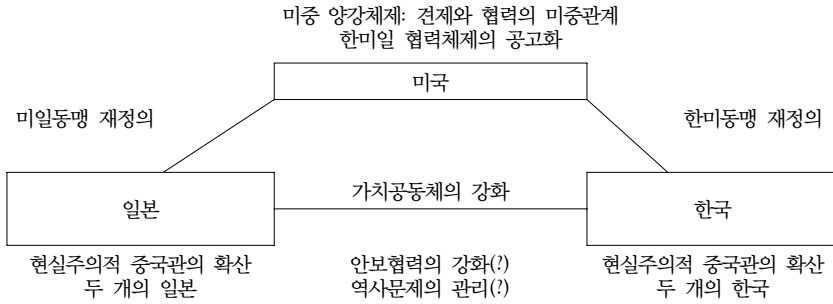


그림 2. 포스트 탈냉전 시대 한일관계의 구조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한일관계 구도는 그림 2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양강체제를 맞이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과 견제라는 양면적 관여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미일 협력체제를 공고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대두로 인해 현실주의적 중국관이 확산되면서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가치공동체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개의 일본’과 ‘두 개의 한국’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협력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가령 일본의 아시아주의 노선과 한국의 진보세력이 정권을 담당하는 경우, 한일 양국은 가치공동체의 발전에 따라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일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발전시키겠지만, 중국을 상당히 의식한 결과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는 주저할 것이다. 반면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정책과 한국의 보수세력이 정권을 담당하는 경우, 한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강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2×2의 동력과 더불어 역사문제 또한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일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V. 나가며

냉전 시기 한일관계는 미소냉전이라는 구조 속에 반공 전선국가와 반공 기지국가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미국의 존재는 한일관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 한국과 일본이 연계되어 ‘유사동맹적 특수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보혁 대립 구조 속에서 요시다 노선에 입각한 국가전략을 추구하던 일본,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위치설정하고 이를 위해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한국, 이 양국 사이에 가치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었다. 동시에 한일 안보협력은 현실상 불가능했으며 전략적 경제원조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과거사 문제는 애써 외면되면서 양국 사이의 진정한 화해를 방해하고 있었다.

탈냉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기본적인 가치관의 공유 및 힘의 상대적 균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일관계는 대등적 관계로 전환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가치공동체가 형성되어 갔으며, 냉전 시기 터부시되었던 안보교류 및 대화가 진척되었다. 하지만 역사문제의 분출을 억제하던 요소였던 냉전의 붕괴는 역사문제의 정치성을 제고시켰다. 이렇듯 가치공동체의 강화라는 긍정적 힘과 역사문제라는 부정적 힘이 상호 교차하며 탈냉전 이후 한일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포스트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관계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질서에 개입하면서, 이를 지탱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견고하게 하려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내에서도 중국의 대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질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2010년 수상담화에서처럼, 전향적 정책이 실시되며 역사문제가 관리되면서 양국 간 관계를 양호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같은 구체적 군사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척되어 가고 있으며,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의 형태로 한일 군사협력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모멘텀이 확장되어 역사문제가 충분히 관리된다면 한일관계는 비약적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문제가 한일관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적극적 관리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여부에 따라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도는 크게 변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1-06-28    심사일자: 2011-07-19    게재확정: 2011-08-23

## 참고문헌

- 기미야 다다시. 2006. 「한일관계의 역학과 전망: 냉전기의 다이너미즘과 탈냉전기에서의 구조변용」.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372-403.
- 김성철. 2009. 「일본 민주당 정부와 미일관계」. 『정세와 정책』 162호. pp. 10-12.
- 남기정. 2001.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9권 1호. pp. 165-189.
- 박영준. 2009. 「일본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JPI 정책포럼』 9월. pp. 1-15.
- 박정진. 2010.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에 즈음한 제언」. 『코리아 연구원 현안진단』 171호. pp. 1-5.
- 서동만. 2006. 「한일 안보협력에 관하여」.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41-171.
- 서승원. 2011. 「긴박한 동북아 안보정세, 그리고 긴밀화해 가는 안보협력」. 최관·서승원 편. 『저팬 리뷰 2011』. 서울: 문. pp. 18-39.
- 소토카 히데토시 등(진창수·김철수 역). 2006. 『미일동맹』. 서울: 한울.
- 오코노기 마사오. 2008.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 체제마찰에서 의식공유로」. 장달중·오코노기 공편.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서울: 아연출판부. pp. 11-18.
- 요시다 유타카(이애숙 역). 2004. 『일본인의 전쟁관』. 서울: 역사비평사.
- 이숙중·이원덕. 2009. 「글로벌 시대의 한일관계」. 『EAI 논평』 4호. pp. 1-3.
- 이원덕. 2006. 「한일 과거사갈등의 구조와 해법 모색」.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404-434.
- 이원덕. 2009.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새로운 한일관계」. 『코리아 연구원 현안진단』 27-02호. pp. 1-5.
- 장달중. 2008. 「세계화와 민족주의 사이의 한일관계: 상호경시적 흐름에 대한 고찰」. 장달중·오코노기 공편.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서울: 아연출판부. pp. 19-42.

- 장박진. 2009.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서울: 논형.
- 진창수. 2008.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변화: 아시아주의로의 복귀」. 『일본연구논총』 27호. pp. 31-64.
- 진창수. 2010. 「한일강제병합 100년: 간충리 담화의 평가와 한일관계」. 『정세와 정책』 173호. pp. 1-4.
- 조양현. 2009. 「일본 민주당 정부의 대외정책 및 한일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12월 9일. pp. 1-13.
- 최희식. 2008. 「60년대 일본의 아시아 지역정책: 미일동맹과 자주외교 사이의 협곡」. 『일본연구논총』 28호. pp. 145-172.
- 최희식. 2009(a). 「현대 일본의 아시아 외교전략: 내재적 접근에서 외재적 접근으로」. 『국제정치학논총』 49-2호. pp. 33-58.
- 최희식. 2009(b). 「이승만 정부 시기의 한일관계: 한미일 냉전전략의 불협화음과 한일관계의 정체」. 『세계지역연구논총』 27-3호. pp. 121-146.
- 최희식. 2011.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연구: 1969년 한미일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1호. pp. 289-310.
- 파일, 케네스 B.(이종삼 역). 2008. 『강대국 일본의 부활』. 서울: 한울(*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Public Affairs, 2007).
- 宇都宮徳馬. 1965. 「日韓問題と日本のアジア外交」. 『アジア時報』 9月号.
- 五十嵐武士. 1999. 『日米関係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 倉田秀也. 2001. 「朴正熙自主防衛論と日米韓国条項」. 小此木政夫·文正仁編. 『市場·国家·国際体制』.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pp. 147-188.
- 金斗昇. 2001. 「池田政権の安全保障政策と日韓交渉」. 『国際政治』 10月. pp. 192-210.
- 高崎宗司. 2004. 『検証日朝交渉』. 東京: 平凡社.
- 小此木政夫. 2001. 「新冷戦下の日米韓体制-日韓経済協力交渉と三国戦略協調の形成」. 小此木政夫·文正仁編. 『市場·国家·国際体制』. 慶應義塾大学出版会. pp. 189-212.
- ヴィクター・D・チャ(倉田秀也訳). 2003. 『米日韓反目を超えた提携』. 東京: 有斐閣.
- 内閣総理大臣官房監修. 1992. 『海部内閣総理大臣演説集』.
- 鳩山由紀夫. 2009. 「私の政治哲学」. 『Voice』 9月号. pp. 132-141.
- 渡邊昭夫. 1992. 『アジア太平洋の国際関係と日本』.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The Structure of Korea-Japan Relationship after 1965 and the Relation under Democratic Party Government

Choi, Hee-Sik

Full-Time Lecturer, School of International & Area Studies,  
Kookmin University

During the Cold-War, the U.S. tried to build an anti-communism block by connecting front-communism country (Korea) and rear base country (Japan). H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ecame that of a 'quasi alliance,' which was connected by the U.S.'s Asia policy. However,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political system, it was not possible to build a value commun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the settlement of the history issue was also disregarde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was impossibl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War, as the Korean economy expanded and the experienced democratization, the relationship was changed into one in which sharing basic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B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hich was taboo before, has made steady progress. But, the demise of the Cold-War which controlled the historic problem propelled Korea and Japan into an emotional clash.

As we step into the 'the period of G2 (America and China),' expectations are high for a new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merica will intervene in an Asian dispute, and try to build a solid cooperation system among America, Korea, and Japan. Also, because of the fear of a rising power, China, Korea and Japan have come to common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ooperation between 'homogeneous countries' which share basic values. Hence, the Korea-Japan relation has reached a satisfactory stage, as can be witnessed in the statement of Prime Minister Kan. Reflecting these changes, military pacts such as the pact on comprehensive protection on military information and the pact of mutual support on armament have begun their negotiations since 2010.

Key Words: Korea-Japan relation, Democratic Party government, value community, historic problem,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최희식.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전임강사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북악관 1422호  
Tel\_02 910 4367  
E-mail\_choihs@kookmin.ac.kr

